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친박만 하! 탈 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은경, 김정선 : 796-8364)
제 목 검은돈 세탁 쌍용, 김석원 의원직 사퇴, 검찰은 공정수사
날 짜 1996.4.30. (총 3 쪽)

보 도 자 료

검은 돈 세탁 쌍용 김석원 의원직 사퇴, 검찰은 공정수사

일시 및 장소 : 4월 30일 12시 을지로 쌍용본사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4월 30일 12시에 을지로 쌍용그룹 본사 앞에서 '검은돈 세탁소 쌍용, 김석원 의원직 사퇴, 검찰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 또한 이집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금융기관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석원을 고발한 件에 대해 빠르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촉구서를 발표, 검찰에 발송 하였다.
3. 이 집회는 '검은돈 세탁, 쌍용세탁소' '쌍용사과는 한상자 3억?' '김석원 선거는 '돈잔치' '검은돈 상자'라는 글씨가 쓰여진 경복능금 사과상자 25개를 쌓으면서 시작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쌍용그룹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전두환씨의 비자금을 불법실명전환해 준 당사자이며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원 전 쌍용회장의 의원직 자진사퇴, 재벌에 약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이러한 쌍용사과상자와 같은 불법 검은돈 세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인 돈세탁방지의 조항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실명전환이 불가능하며, 이와 같이 검찰이 김석원을 감싸고 돌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김석원과 검찰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 하였다.

※ 별첨자료 : 1. 집회유인물
2. 검찰 수사촉구서

도둑질한
국민세금
숨겨온 자가
국회의원?



쌍용사과는 한상자에 3억?

돈세탁소 쌍용 김석원 전회장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김석원 전 쌍용회장은 의원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석원 전쌍용회장은 전두환씨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장본인입니다. 또한 3억 짜리 사과상자 여러개를 (약 20억원 추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장본인이 어떻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원은 유권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자진사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밝히고 겹쳐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쌍용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벌은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특혜와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재벌이 앞장서서 검은돈을 세탁해주고 보관해준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입니다. 쌍용은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하고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은 돈세탁사실에 대해 지난 1월에 알고서도 총선이 끝난 후에야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은 참여연대 회원이 김석원씨를 불법실명전환에 대해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방해'로 고발을 한 이 시점까지도 아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벌에게 약한 검찰의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재벌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검은 돈 세탁을 엄벌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한 노력으로 부패방지법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는 돈세탁방지입니다. 돈세탁을 엄벌하는 부패방지법은 검은돈 재활용을 근절하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돈세탁방지법,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 ☎ 대구달성군 신한국당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하여 김석원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 053-565-1962~3
-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에서 제안한 부패방지법 제정을위한 국민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 검찰의 수사 착수를 끝까지 요구합니다. ☎ 02-530-111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김창국)

전화 796-8364 팩스 797-7412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 797-8200]

검찰에 보내는 수사촉구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1. 귀청에서는 지난 4월 15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2차공판(재판장 김영일) 검찰 신문과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61억 2천 7백만원을 전액 만 원권으로 쌍용양회 경리부에 보관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돈은 사과상자 25개에 넣어 진 상태였고, 지난 1월 24일에 압수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귀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압수 한 시점과 국민에게 밝혀진 시점이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발표시기를 늦춘 이유는 충분히 해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의 사과상자가 압수된 1월 24일과 압수사실이 발표된 4월 15일 사이의 긴 공백기간에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귀청의 발표연기는 특정 후보(김석원 쌍용 전회장)를 당선시키기 위한 의도로서 통합선거법 제 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의 위반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탁으로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김석원 쌍용그룹 전회장의 행위는 참여연대에서 지난 4월 19일 서울지검에 고발한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귀청에서는 김석원씨의 불법행위를 적발 하고도 김석원 당사자를 조사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해 11월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대우그룹의 이경훈 전회장을 즉각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경우는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김석원의 이에 대한 수사 행태는 범죄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루 빨리 공정한 수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쌍용그룹에 보관되어 있던 61억여원의 금액은 검찰이 직접 확인한 액수가 아니라 쌍용 측에서 밝힌 액수입니다. 검찰이 쌍용양행 창고에서 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사과 상자들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 김석원씨의 지구당사무실에 전달되어 그 내용물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쌍용그룹 보관의 불법실명자금에 대하여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밝혀짐으로써 국민의 의혹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5. 지금까지 木件에 대하여 귀청에서 밝힌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본단체는 이 木件에 대한 귀청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고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빠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본단체와 국민의 의문점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1996. 4.30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